

「 2020년 1월 18일 시행 」

제26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번호	
성명	

문제 책형
B

【인문사회계열 : 선택과목】

선택유형	선택과목 (1)	선택과목 (2)	선택과목 표기 (○)
1	행정학	민법총칙	
2	행정학	형사소송법	
3	행정학	경제학	
4	행정학	소방학개론	
5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6	민법총칙	경제학	
7	민법총칙	소방학개론	
8	형사소송법	경제학	
9	형사소송법	소방학개론	
10	경제학	소방학개론	

※ 주의사항

1.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선택한 선택과목 (1), 선택과목 (2)가 시험지의 선택과목 (1), 선택과목 (2) 및 답안지의 선택과목 (1), 선택과목 (2)와 동일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답안지는 원서접수 시 선택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됩니다.



중앙소방학교
NATIONAL FIRE SERVICE ACADEMY

【 행정학 】

1. 광역행정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종합적 계획 관리의 중요성 증대
 - ②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권·경제권의 확대
 - ③ 규모의 경제 구현을 통한 행정 효율성의 제고
 - ④ 자치단체 간의 행정·재정력 격차로 인한 행정 서비스의 불균등 문제 대두
 - ⑤ 도시정부 간에 안정적 협업을 위한 가외성 확보의 요구

2. 계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 System : PPBS)와 영기준 예산제도(Zero Based Budget : ZB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PPBS는 계획과 예산을 통합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예산제도로 예산의 단년도주의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 ② PPBS는 수립된 계획에 대한 상황변화적 대응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예산 배분의 합리성이 저해될 수 있다.
 - ③ ZBB는 총체주의적 예산 결정 방식에 기반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한다.
 - ④ PPBS는 기획지향적인 반면 ZBB는 평가지향적이다.
 - ⑤ PPBS에 비해 ZBB는 하향적 의사결정 방식을 취한다.

3.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 ②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 ③ 예산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선호를 반영함으로써 대응성을 강화할 수 있다.
 - ④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가용예산이 부족한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 실효성이 미흡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주민참여 방식을 정할 수 있다.

4. 신공공관리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성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관리를 강조한다.
 - ②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한 이론이다.
 - ③ 정부의 방향잡기(steering)의 역할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④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급자 중심의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주장한다.
 - ⑤ 계약 등 간접제공 방식에서 명령이나 위계에 의한 직접제공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5. 행정과 경영은 속성상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관점이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국 역사에서 업관주의의 폐단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였다.
 - ② 행정관리론과 신공공관리론을 통하여 행정에 사기업관리방식을 도입하였다.
 - ③ 행정학을 정치학으로부터 분리하여 독자적인 학문 분야로 정착시켰다.
 - ④ 과학적 관리(Scientific management)와 정부재창조(Reinventing government)에 공통된 전제를 제공하였다.
 - ⑤ 직업공무원제를 옹호하는 행정재정립운동(Refounding movement)을 촉발하였다.

6.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관통합형은 의결 기능과 집행 기능을 분리하지 않고 의회에 귀속시키는 형태를 띤다.
 - ② 영국의 의회형과 미국의 위원회형은 기관통합형의 대표적 사례이다.
 - ③ 기관분리형은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한 형태이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기관 구성 형태로 기관통합형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 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는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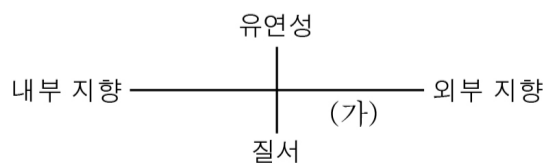
7. 공직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은 민간부문 종사자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
- ② 경제적 보상이 민간기업에 비해서 공공조직에서는 잘 작동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한다.
- ③ 공무원에 대한 동기부여에 있어서 내재적 요인보다 외재적 요인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 ④ 공무원 입직 이후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공직봉사동기의 내재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 ⑤ 공공부문에 종사하기 이전 성장과정에서 공익을 위한 이타적 성향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8. 지방재정자립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 ② 지방재정자립도가 비슷하면 자치단체의 재정력은 유사하다.
- ③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의 의존재원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 ④ 의존재원이 적을수록 지방재정자립도는 높게 나타난다.
- ⑤ 지방재정자립도는 경상적 경비와 임시적 경비 비율 등의 세출구조를 고려하지 않는다.

9. 퀴(Quinn)의 경쟁적 가치의 조직문화 유형 중에서 (가)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생산 중심 문화
- ② 인적 자원 문화
- ③ 개방 체제 문화
- ④ 위계 질서 문화
- ⑤ 관계 지향 문화

10. 아른스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참여의 실질적 의미 및 영향력 정도를 기준으로 참여의 형태를 구분하고 있다.
- ② 교정단계(therapy)에서는 주민의 태도나 행태 등을 교정해 나가는 일이 벌어진다.
- ③ 정보제공단계(informing)는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단계이다.
- ④ 정보제공단계(informing), 의견수렴단계(consultation), 유화단계(placation)는 비참여의 범주에 속한다.
- ⑤ 주민통제단계(citizen control)는 주민이 정부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든 결정을 주도하는 단계로 가장 높은 수준의 주민참여 단계이다.

11. 현대 조직이론에서 유기적 조직구조의 특징 혹은 상황조건으로 옳은 것은?

- | | |
|--------------|-------------|
| ㉠ 표준 운영절차 | ㉡ 넓은 직무범위 |
| ㉢ 계층제 | ㉣ 분권화 |
| ㉤ 성과 측정의 어려움 | ㉥ 분업이 쉬운 과제 |
| ㉦ 분명한 책임관계 | ㉧ 비공식적 대면관계 |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12.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민자치는 주민에 의한 자치로서 대륙형 자치이다.
- ② 단체자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이다.
- ③ 주민자치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이 명확하다.
- ④ 주민자치는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어 대내적 자치라고 부르기도 한다.
- ⑤ 단체자치에서는 자치단체가 국가의 일선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13.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② 국세청장
- ③ 통계청장
- ④ 국가정보원장
- ⑤ 한국방송공사 사장

14. 초기 인간관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을 정서적 존재로 인식한다.
- ② 조직 내에서의 의사전달과 참여를 강조한다.
- ③ 비공식집단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 ④ 조직에 대한 외부환경의 영향을 경시한다.
- ⑤ 조직운영의 민주화가 궁극적 목표이다.

15. 행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계적 효율성은 정치·행정이원론 시대에 경영학의 과학적 관리론이 행정학에 도입되면서 중시되었다.
- ② 예산의 분배과정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 ③ 사회적 효율성은 행정의 사회목적 실현과 다원적 이익들 간의 통합조정 및 구성원의 인간가치의 실현 등을 강조한다.
- ④ 발전행정론은 효과성을 강조한 행정이론이다.
- ⑤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은 행정의 본질적 가치라기보다는 수단적 가치이다.

16. 1980년대 이후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다양한 가치와 패러다임의 공존을 인정한다.
- ② 탈물질화와 탈관료제화를 추구한다.
- ③ 공직윤리의 수준은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과 감정이입을 통해 향상된다.
- ④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reason)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한다.
- ⑤ 이미 만들어진 결과보다 만들어져 가는 과정과 행동을 중시한다.

17. 국가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위공무원단의 목적은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 ②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며 신분보장이 되는 공무원이다.
- ③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은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한다.
- ④ 국회에 있어서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다.
- 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정무직공무원이다.

18.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전문가보다는 일반행정가를 선호한다.
- ② 상·하위직 간에 계급의식이나 위화감이 크다.
- ③ 인사관리의 탄력성과 신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 ④ 직무수행의 적격자를 공직 내부에서만 찾을 수 있는 폐쇄형 인사제도이다.
- ⑤ 조직개편이나 직무폐지 시 신분불안의 우려가 없다.

19.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정책에 있어서 비용의 투입과 편익이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실패가 일어난다.
- ② 정치인들의 제한된 임기로 인해 시간할인율(time discount rate)이 높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일어난다.
-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대기업의 자연독점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적 공급이 필요하다.
- ④ 재화의 공급자와 수요자 외에 제3자가 환경오염의 피해를 겪게 되는 경우 시장실패가 일어난다.
- ⑤ 예산극대화 가설에 따르면 관료들이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부실패가 일어난다.

20.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부예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③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 ⑤ 감사원장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1. 정책집행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바티어(Sabatier)의 정책지지연합모형은 하향적 접근방식을 기본적 관점으로 채택하고, 이에 상향적 접근방식을 결합했다.
- ② 버만(Berman)은 집행 현장에서 집행조직과 정책사업 사이의 상호적응(mutual adaptation)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 ③ 엘모어(Elmore)는 정책집행 연구의 접근방법을 전방향적 접근법(forward mapping)과 후방향적 접근법(backward mapping)으로 구분했다.
- ④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는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에 따라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제시했다.
- ⑤ 하향식 접근방법은 정책집행을 정책결정단계에서 채택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본다.

22.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알몬드(Almond)와 파워(Powell)는 정책을 구성정책, 추출정책, 재분배정책, 규제정책으로 유형화했다.
- ② 로위(Lowi)는 정책유형에 따라 정책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양식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 ③ 로위(Lowi)의 정책유형론은 정책유형들 간의 높은 상호배타성을 특징으로 한다.
- ④ 로위(Lowi)에 따르면 규제정책에서는 포크배럴(pork-barrel)이나 로그롤링(log-rolling)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 ⑤ 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에 따르면 보호적 규제정책은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우려가 적어 참여자 사이의 갈등 발생 가능성이 낮다.

23. 근무성적평정의 유형 중 도표식 평정척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우리나라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사용하고 있다.
- ② 연쇄효과(halo effect)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 ③ 근무성적을 피평정자 간에 서로 비교해서 서열을 정하는 방법이다.
- ④ 평가과정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⑤ 행태 기준 평정척도법의 단점인 행태 유형 간의 상호배타성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평정방법이다.

24.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정 사회문제의 중요성이 증가하면 정부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 ② 비슷한 선례가 있는 사회문제는 쉽게 정부의제로 채택되고 해결책이 강구될 수 있다.
- ③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동원형이나 내부접근형 중심의 정책의제설정이 이루어진다.
- ④ 문제의 단순성이나 구체성과 같은 사회문제의 외형적 특성은 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친다.
- ⑤ 극적인 사건이나 위기, 재난은 사회문제를 정부의제화시키는 점화장치(triggering device)로 작용한다.

25.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기준으로서 효과성을 강조한다.
- ② 다양한 정부 정책이나 사업들을 비교하는 데 용이하다.
- ③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 ④ 비용과 편익을 모두 동일한 척도로 추정한다.
- ⑤ 비용과 편익의 가치에 대한 각 개인의 주관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 민법총칙 】

1. 민법상, 임의대리인 甲이 선임한 복대리인 乙과 법정 대리인 A가 선임한 복대리인 B가 있을 때, 甲과 A의 복임권과 본인에 대한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은 원칙적으로 乙을 선임할 복임권을 갖지 못하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복임권을 가진다.
 - ② 甲이 선임한 乙이 책임이 아니거나 乙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만, 甲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 ③ 甲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乙을 선임한 경우, 甲이 乙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도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히 한 때가 아니면 甲은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
 -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는 B의 대리행위에 관하여 그 선임·감독상 과실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본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⑤ A가 부득이한 사유로 B를 선임한 경우, A는 B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도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히 한 때가 아니면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

2.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고려될 수 있는 무경험이란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 ② 피해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 ④ 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 ⑤ 증여계약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3. 피한정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 본인의 의사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 ②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절차는 일정한 자의 청구가 없어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다.
 - ③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 ④ 피한정후견인은 약혼이나 혼인을 하려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⑤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받기 전에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한 경우에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후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4. 미성년자 甲은 어느 날 부모로부터 십만 원의 용돈을 받았는데, 부모 몰래 중고판매상 乙로부터 노트북을 백만 원에 구입하기로 약속하고 계약금 십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은 부모의 동의 없이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甲은 부모의 동의 없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 ③ 甲이 乙로부터 위 노트북을 인도받은 경우, 甲의 부모가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甲은 그 노트북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④ 甲 측에서 위 매매계약을 추인하기 전에 乙이 위 매도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어야 한다.
 - ⑤ 乙이 甲의 부모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위 매매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하였는데,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특정한 영업을 하는 경우, 제한능력자를 위한 시효정지에 관한 「민법」 제17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채권자가 채무자를 고소하여 형사소송이 개시되어도 이를 가지고 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없다.
- ③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④ 공무원 파면처분의 효력을 다투고자 할 때, 파면처분 이후의 보수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보수금채권 자체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⑤ 동일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의 일부 변제도 그것을 채무의 일부로서 변제한 이상 그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6. 민법상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강행규정 위반을 이유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권자가 추인한 후에는 그 행위는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한다.
- ③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유효하게 추인할 수 없다.
- ④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추인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7. 甲의 부탁으로 그의 사진기를 보관하던 乙은 丙에게 甲의 사진기 매도에 관한 대리인이라 사칭(詐稱)하고 그 사진기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도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丙이 알았다고 해도 丙은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 ② 甲이 乙에 대하여 추인하였다면 그 추인 사실을 모르는 丙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丙이 甲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았다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④ 甲의 추인이 없는 경우, 乙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丙에게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⑤ 乙이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위 매도 행위를 하였다면, 甲의 추인이 없어도 乙은 丙에게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8.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신의칙을 근거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 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ㄷ.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신의칙 등 일반 원칙에 의해 그 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ㄹ.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매도행위가 무권대리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ㄷ ⑤ ㄷ, ㄹ

9.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자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②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임의대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 ③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10. 민법상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 ② 주소가 있는 자는 거주소를 정할 수 없다.
- ③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 ④ 주소를 정함에 있어 정주(定住)의 의사는 요구되지 않는다.
- ⑤ 어느 행위에 있어서 거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11. () 안에 알맞은 용어를 옳게 나열한 것은?

- 토지임차권은 타인의 토지에 자기의 물건을 부속시킬 수 있는 (가)이다.
- 대리인의 대리권과 같이 타인에게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나 자격을 (나)(이)라 한다.
- 소유권에는 물건을 사용, 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는 (다)이 있다.

- | | | | |
|---|----|----|----|
| | 가 | 나 | 다 |
| ① | 권원 | 권한 | 권능 |
| ② | 권능 | 권한 | 권원 |
| ③ | 권한 | 권능 | 권원 |
| ④ | 권원 | 권리 | 권한 |
| ⑤ | 권한 | 권리 | 권능 |

12.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표의자의 과실로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
- ②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 ③ 의사표시의 부도달 또는 연착으로 인한 불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의자의 상대방이 부담한다.
- ④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을 그 법정대리인이 안 경우,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을 주장할 수 있다.
- ⑤ 채권양도통지서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채무자의 가정부가 수령한 경우, 그 직후 한 집에 거주하고 있던 채권양도인이 그 우편물을 회수하였다더라도 그 통지서는 채무자에게 도달한 것이다.

13.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 ② 당사자가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 대차를 한 후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 ③ 소송에서 허위가 아닌 진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 ④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 ⑤ 부정행위(不貞行爲)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취지에서 처(妻)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妻)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14. 「민법」 제71조의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를 때, 총회일이 2020년 1월 17일(금) 14시로 정해졌다면, 언제까지 소집통지를 해야 하는가?

- ① 2020년 1월 9일(목) 24시까지 발송
- ② 2020년 1월 10일(금) 24시까지 발송
- ③ 2020년 1월 13일(월) 24시까지 발송
- ④ 2020년 1월 9일(목) 24시까지 도착
- ⑤ 2020년 1월 10일(금) 24시까지 도착

15.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 ② 법정조건도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에 해당한다.
- ③ 채무면제와 같은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④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는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 ⑤ 협의이혼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6.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제척기간도 중단될 수 있다.
- ②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듯이 제척기간도 그 기간 만료로 인한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 ③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 ④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 ⑤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은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비로소 법원에서 고려된다.

17. 진의 아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진의 아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 ② 표시자가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 ③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님 의사표시인지의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 ④ 혼인이나 입양과 같은 가족법상의 신분행위에 대해서는 진의 아님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 1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⑤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고 면직처분을 한 자가 이와 같은 의사를 알고 있었다면 「민법」 제107조에 의하여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18.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에 관하여도 그 거래가 사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민법」 제110조에 정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법리가 적용된다.
- ③ 거래상대방의 피용자도 「민법」 제110조 제2항에 정한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의 제3자에 해당할 수 있다.
- ④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그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므로, 그 매도인이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 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한 이후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및 그 취소사실을 몰랐다면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19.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
- ② 감사는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해관계인이나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④ 법인의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 ⑤ 법인의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20. 법률행위의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어음·수표행위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 ② 일정한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 ③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명백히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 ④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기한을 붙일 수 있다.
- ⑤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21.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주물과 별도로 종물만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②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 ③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어야 한다.
- ④ 주물과 종물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 ⑤ 호텔의 각 방실에 시설된 전화기는 호텔 건물에 대한 종물이라고 할 수 없다.

22.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체결된 농지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②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 ③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에 대하여 甲이 허가를 받기 전에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중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은 계약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 ④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에 대하여 甲이 허가를 받기 전에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일방적으로 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
- ⑤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 권리자는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권리자 본인에게 위 처분행위의 효력이 발생함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23.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 ②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한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반환의무를 진다.
- ③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 ④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였다더라도, 법원의 그 허가결정이 취소되었다면 관리인의 처분행위는 그 처분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 ⑤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24. 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사원총회는 청산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존속한다.
- ② 청산인은 「민법」 제88조 제1항의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 ③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 ④ 법인이 해산한 경우,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 ⑤ 법인 해산 후의 잔여재산 처분에 관하여 정관에서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정관에서 정한 바가 민법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5.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대표권이 없는 이사도 법인의 기관이므로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② 법인의 이사회에서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 그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 ③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6조는 임의규정이다.
- ④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유추적용된다.
- ⑤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에서는 「민법」 제48조에 의하여 법인이 성립한 때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재단법인에 귀속한다.

【 형사소송법 】

1.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 ② 검사는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는 경우, 그 체포는 위법하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⑤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없다.

2. 상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하는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ㄴ. 보통항고는 원심결정을 취소할 실익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
- ㄷ.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 ㄹ.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변호인은 상소할 수 없다.
- ㅁ. 상소를 취하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건에 관하여 다시 상소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ㄱ, ㄷ, ㅁ
- ⑤ ㄴ, ㄷ, ㅁ

3.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적법한 변론종결 후 검사가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반드시 변론을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한다.
- ② 공소장이 변경되면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③ 공소장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 ④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⑤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에게 예기치 않은 타격을 주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면 공소장변경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4.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수사기관이 甲 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였더라도,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에 그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 ㄴ. 수사기관이 해당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따로 그 사람에게 영장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 ㄷ.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압수물은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ㄹ.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 ㅁ. 사법경찰관이 속칭 ‘전화사기’ 피의자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하면서 그 주거지에 보관하던 타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든 지갑 등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 ④ ㄴ, ㅁ ⑤ ㄷ, ㅁ

5. 적법절차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증인의 증언 전에 일방 당사자만이 증인과의 접촉을 독점하게 되면, 상대방은 증인이 어떠한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를 알 수 없어 그에 대한 방어책을 준비할 수 없게 되며 상대방이 가하는 예기치 못한 공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으므로, 헌법이 규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
- ②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 시까지의 미결구금을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평등원칙 등을 위배하여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 ③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제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④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제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함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되는 것을 뜻한다.
- ⑤ 범죄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2002. 1. 14. 법률 제6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

6.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 ②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 ③ 간이공판절차에서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 경우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⑤ 적법하게 개시된 간이공판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여 인정된 증거동의의 효력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해도 여전히 유지되므로 다시 해당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7.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재정신청의 취소는 관할 고등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기록이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되기 전에는 그 기록이 있는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 ②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고등법원은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 ③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④ 재소자가 재정신청의 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위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라도 재소자의 재정신청서는 적법하다.
- ⑤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 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8.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재판의 결과뿐만 아니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까지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③ 재판장의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으나, 불허가결정 또는 등사기록의 사용목적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인 등사허가결정에는 불복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9.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②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검사의 준항고가 허용된다.
- ③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의 범위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뿐만 아니라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도 포함된다.
- ④ 불출석상태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소송기록이 항소법원에 도달하기 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위법하다.
- ⑤ 피고인의 구속기간에는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을 산입한다.

10.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고소권자로부터 고소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를 한 경우, 고소 기간은 고소권자가 아니라 대리고소인을 기준으로 대리고소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 ③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④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⑤ 친고죄에 있어서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그 범죄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한 별도의 고소를 요하지 않는다.

11.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 ② 예비배심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없다.
- ③ 공소장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⑤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2.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중지미수범의 경우 공소시효기간은 미수감정된 형을 기준으로 한다.
- ② 공소장변경으로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③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구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④ 공범 중 1인으로 기소된 자가 범죄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무죄로 확정된 그 피고사건에서 공범으로 지적된 진범인에 대하여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생긴다.
- ⑤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13. 공소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취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으며, 공판정 내외를 불문하고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확정된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소송절차 중에도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
- ③ 공소취소 후 재기소제한을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④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판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⑤ 공소취소 후 재기소제한은 종전 범죄사실 그대로 재기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범죄의 태양, 수단, 피해의 정도, 범죄로 얻은 이익 등 종전의 범죄사실을 추가 변경하여 재기소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14.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에 대해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한다.
- ㄷ.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없음에도 수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
- ㄹ.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 ④ ㄴ, ㄹ ⑤ ㄷ, ㄹ

15.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제111조 제3호(1984. 8. 4. 법률 제3744호)의 교통사고 신고의무는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의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 ③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④ 주취운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에게 호흡 측정기에 의한 주취 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 ⑤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피의자의 진술이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그 후 공개된 법정에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임의로 한 법정 진술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16.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당해 증인을 신문하여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 ②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거나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다.
- ④ 피고인의 자백을 보장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장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17.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재심개시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고,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제적 사유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 ②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
- ③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 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 ④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특별사면이 있으면 별도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고,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은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18. 전문심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전문심리위원회는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 ②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동시에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결정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신청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 ③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회는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 ④ 전문심리위원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참여한 때에는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⑤ 전문심리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 참여할 수 있다.

19. 거증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 있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 ③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 ④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본 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더라도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면 허위의 사실이라 볼 수 있다.
- ⑤ 명예훼손죄에 있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피고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20.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였음에도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 ② 증인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미국 범죄수사대(CID)의 수사관들이 작성한 수사 보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④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 함은 조서 작성 당시 원진술자의 진술대로 기재되었는지의 여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연유나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고려할 것이 아니다.
- ⑤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없다.

21. 항소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피고인 소환이 부적법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제1심의 절차가 위법하고 그에 따른 제1심 판결이 파기되어야 하는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 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 ③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하는 경우, 제척의 원인이 된다.
- ④ 항소심에서 포괄일죄 중 일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이 같지 않게 되므로 포괄일죄는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 ⑤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22.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 족하다.

ㄴ.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거가 요구된다.

ㄷ.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있어서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거가 요구된다.

ㄹ. 「형법」 제6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3. 면소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 甲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한 경우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②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경우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구하는 상소가 가능하다.
- ③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④ 면소판결의 사유 중 ‘사면이 있을 때’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을 때를 말한다.
- ⑤ A죄와 B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A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공소제기된 B죄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4.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 ②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 송달에 의하여 한다.
- ③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 ④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자백만 있고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 ⑤ 즉결심판절차에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5. 증거동의를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서류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
- ㄴ.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증거동의를 효력이 없다.
- ㄷ.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증거동의를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ㄹ. 구속수감되어 있던 사람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고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그 자체는 불법 감청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한다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 ㅁ.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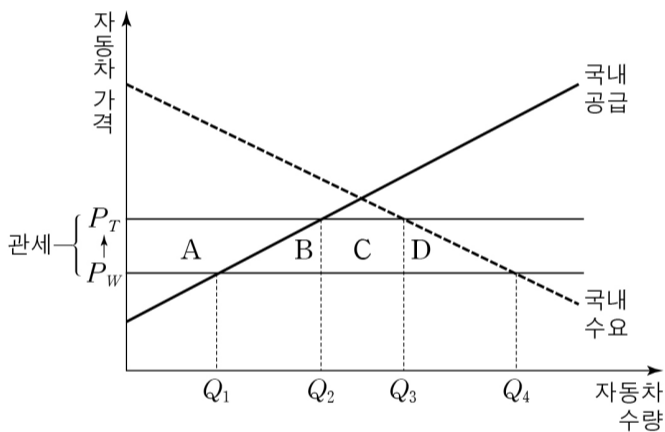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 경제 학 】

1. 정부의 가격하한제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원의 낭비
- ② 비효율적으로 높은 거래량
- ③ 판매자들 간의 비효율적인 판매 배분
- ④ 비효율적으로 높은 품질의 상품 제공
- ⑤ 최저임금제도 실시로 미숙련 노동의 초과공급 발생

2. 그림과 같이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가격이 국제가격(P_W)에서 관세를 더한 가격(P_T)으로 변할 경우 관세 부과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D는 각 영역의 면적이다.)



- ① 관세 부과로 총잉여는 감소한다.
- ② 관세 부과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 ③ 관세 부과로 생산자 잉여는 A만큼 증가한다.
- ④ 관세 부과로 정부수입은 B+C+D만큼 증가한다.
- ⑤ 관세 부과로 국내 생산자의 공급량은 $Q_1 \sim Q_2$ 만큼 증가한다.

3.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히 크기 때문에 화폐공급이 증가하여도 이자율에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나타내는 용어로 옳은 것은?

- ① 구축효과
- ② 정책시차
- ③ 유동성 함정
- ④ 승수효과의 하락
- ⑤ 화폐의 장기 중립성

4. 기펜재(Giffen goods)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 ㄱ.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은 증가한다.
- ㄴ. 보상수요곡선은 우상향하는 모양을 가진다.
- ㄷ.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음(-)의 값을 가진다.
- ㄹ. 열등재 중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큰 경우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5. 갑의 월소득이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증가하여 꿀 소비가 100개에서 120개로 늘었다. 이러한 경우 꿀의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 ① 0.25 ② 0.5 ③ 1
- ④ 2 ⑤ 4

6. X재 독점기업은 수요곡선이 서로 다른 시장 A, B에서 이윤 극대화를 위해 가격차별을 실시하고자 한다. 시장 A, B의 수요곡선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이 기업의 X재 생산의 한계비용이 3원에 고정되어 있다면, 시장 A, B에서의 이윤 극대화 가격은? (단, 시장 간 X재의 재판매는 불가능하다.)

$$Q_A = -10P_A + 80, \quad Q_B = -4P_B + 20$$

	시장 A에서의 가격(원)	시장 B에서의 가격(원)
①	4.5	2.5
②	5.5	2
③	5.5	4
④	7.5	2
⑤	7.5	4

7. 표는 컴퓨터 시장의 가격별 수요량과 공급량을 나타낸다. 컴퓨터 시장의 균형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는 각각 얼마인가?

(단위 : 만 원, 개)

컴퓨터 가격	150	140	130	120	110	100	90	80	70
컴퓨터 수요량	0	1	2	3	4	5	6	7	8
컴퓨터 공급량	8	7	6	5	4	3	2	1	0

소비자 잉여(만 원) 생산자 잉여(만 원)

- | | | |
|---|-----|-----|
| ① | 0 | 0 |
| ② | 60 | 60 |
| ③ | 60 | 100 |
| ④ | 100 | 60 |
| ⑤ | 100 | 100 |

8. 생산가능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떤 재화의 생산량이 주어졌을 때 다른 한 재화의 가능한 최대 생산량을 나타낸다.
- ② 생산가능곡선을 제외한 내부 영역은 실현 가능하나 비효율적인 생산 조합이다.
- ③ 생산가능곡선을 제외한 외부 영역은 실현 불가능한 생산 조합이다.
- ④ 생산가능곡선상의 생산 조합은 효율적인 생산 조합을 의미한다.
- ⑤ 생산가능곡선상 생산 조합에서의 생산은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한다.

9. 노동 시장의 노동수요곡선(L_D)과 노동공급곡선(L_S)이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이 시장에서의 균형임금률과 균형고용량은 각각 얼마인가?

$$L_D = -25w + 300, L_S = 25w$$

- | | 균형임금률 | 균형고용량 |
|---|-------|-------|
| ① | 2 | 20 |
| ② | 2 | 50 |
| ③ | 4 | 100 |
| ④ | 6 | 150 |
| ⑤ | 6 | 225 |

10.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비 측면의 외부경제가 존재하면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고,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과소거래되는 문제가 있다.
- ②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자원의 과다소비로 인한 자원고갈현상을 의미한다.
- ③ 생산 측면의 부정적 외부성을 시정하기 위한 조세의 크기는 사회적 최적산출량 수준에서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의 차이와 같다.
- ④ 공공재는 비경합성의 특성으로 인해 사회 전체의 수요를 계산할 때 개별적 수요를 수평으로 집계한다.
- ⑤ 당사자들 간의 자발적 협상을 통해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코우즈(Coase)의 정리이다.

11. 완전경쟁시장에서 A 기업의 평균비용 최저점이 1만 원, 평균가변비용 최저점이 4천 원, 고정비용 전체가 매물비용인 경우 단기에서 A 기업이 생산을 중단하는 가격(원)은?

- | | | |
|------|---------|------|
| ① 0 | ② 4천 | ③ 6천 |
| ④ 1만 | ⑤ 1만 4천 | |

12.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이 존재하는 생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기에서 평균총비용곡선이 U자 형태를 갖는 것은 산출량 증가에 따라 평균고정비용과 평균가변비용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 ② 단기에는 최소비용 산출량 수준에서 평균총비용은 한계비용과 동일하다.
- ③ 단기에서 한계비용이 증가할 때 평균총비용은 항상 증가한다.
- ④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 평균총비용이 상승할 때는 규모에 대한 수익이 감소한다고 한다.
- ⑤ 장기에는 고정비용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변수가 된다.

13. 금융시장 및 증권(주식, 채권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채권은 정부만 발행할 수 있다.
- ② 채권의 가격은 시장이자율과 역의 관계이다.
- ③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은 대표적인 간접금융시장이다.
- ④ 발행된 증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교환되는 시장을 발행시장이라고 한다.
- ⑤ 투자자들이 위험을 기피한다면 안전한 자산의 기대수익률이 가장 높다.

14. 솔로우(Solow) 모형의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 인구증가율이 연평균 3%일 때, 총자본량과 1인당 국민소득의 연간 증가율(%)을 순서대로 옳게 제시한 것은?

- ① 0, 0 ② 0, 3 ③ 1.5, 1.5
- ④ 3, 0 ⑤ 3, 3

15.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정책으로 법정지급준비율 (㉠), 재할인율 (㉡), 공개시장에서 국공채를 (㉢)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 | | |
|---|----|----|----|
| | ㉠ | ㉡ | ㉢ |
| ① | 인하 | 인상 | 매각 |
| ② | 인하 | 인하 | 매입 |
| ③ | 인상 | 인상 | 매입 |
| ④ | 인상 | 인상 | 매각 |
| ⑤ | 인상 | 인하 | 매입 |

16. 어느 국가의 비경제활동인구가 300만 명이고 경제활동인구는 700만 명이며, 실업자 수는 70만 명일 때 고용률(%)은?

- ① 60 ② 63 ③ 70
- ④ 77 ⑤ 90

17. 환율 및 환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환율은 두 나라 화폐 사이의 교환비율을 의미한다.
- ② 금본위제도와 브레튼우즈체제는 고정환율제도이다.
- ③ 일반적으로 외환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양을 갖는다.
- ④ 이자율평가설에 의하면, 국내 금리가 하락하고 해외 금리가 하락하지 않았다면 자국통화의 가치는 상승한다.
- ⑤ 고정환율제도하에서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외환을 매각하는 것은 자국통화의 고평가를 유지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18. 자료는 어떤 국가의 경제 지표를 나타낸다. 이 경제에서 투자지출과 순자본유출의 크기로 옳은 것은? (단, 정부의 이전지출은 없다.)

국내총생산(GDP) = 14조 원, 정부구매(G) = 3조 원
 소비(C) = 10.5조 원, 수출(X) = 3조 원
 조세(T) = 2.5조 원, 수입(IM) = 3.25조 원

	투자지출(조 원)	순자본유출(조 원)
①	0.25	-0.5
②	0.5	-0.25
③	0.5	0.25
④	0.75	-0.25
⑤	0.75	0.25

19. 국제무역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 간의 노동생산성의 차이는 비교우위의 결정 요인이다.
- ② 자유무역하에서는 수입국과 수출국 모두 교역 후에 총잉여가 증가한다.
- ③ 특정 국가가 모든 재화 생산에 절대우위를 가지면 국제무역이 발생할 수 없다.
- ④ 기술개발로 재화 생산량이 증가해서 재화의 상대가격이 하락하면 교역조건은 악화될 수 있다.
- ⑤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관세 부과로 인한 소비자 잉여의 감소는 생산자 잉여의 증가와 조세수입 증가의 합계보다 크다.

20. 어떤 은행의 자본금이 200억 원이고 예금이 800억 원이다. 이 은행은 10%의 지급준비금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대출한다. 은행의 자산가치가 대출금 상환불능으로 12% 하락하였을 때 상환불능 후 은행의 레버리지 비율과 자본금의 크기로 옳은 것은?

	레버리지 비율	자본금
①	5%	100억 원
②	5%	180억 원
③	11%	80억 원
④	11%	180억 원
⑤	15%	170억 원

21. 무차별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무차별곡선이 L자형이라면 두 상품은 완전대체재이다.
- ② 무차별곡선상에서는 소비자의 효용이 어느 점에 서나 다르다.
- ③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성립하면 한계대체율체감의 법칙이 성립한다.
- ④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면 한계대체율체감의 법칙이 성립한다.
- ⑤ 두 상품 사이의 한계대체율이 무차별곡선 어디에서나 일정한 값을 가진다면 두 상품은 완전보완재이다.

22. 표는 자동차와 비행기 1단위 생산에 필요한 A국과 B국의 국가별 노동량이다.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 의하면 A국은 (ㄱ) 생산에 특화하여 수출하고, B국은 (ㄴ) 생산에 특화하여 수출한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품 1단위 생산에 필요한 국가별 노동량>

국가	자동차	비행기
A국(명)	1,000	1,200
B국(명)	800	600

- | | ㄱ | ㄴ |
|---|----------|----------|
| ① | 비행기 | 자동차 |
| ② | 자동차 | 비행기 |
| ③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④ | 해당 없음 | 비행기, 자동차 |
| ⑤ | 비행기, 자동차 | 해당 없음 |

23. 총공급 곡선의 이동 방향이 다른 하나는?

- ① 기술진보로 인한 총공급 곡선의 이동
- ② 임금상승으로 인한 총공급 곡선의 이동
- ③ 법인세 감소로 인한 총공급 곡선의 이동
- ④ 새로운 유전의 발견으로 인한 총공급 곡선의 이동
- ⑤ 이민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로 인한 총공급 곡선의 이동

24.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조건과 그 조건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 | | 조 건 | 상 황 |
|---|----------|---|
| ① | 비탄력적 수요 | - 수량효과와 가격효과가 동일하다. |
| ② | 비탄력적 수요 | - 소비자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
| ③ | 단위탄력적 수요 | - 수량효과가 가격효과를 압도한다. |
| ④ | 탄력적 수요 | - 가격하락 시 생산자들의 판매수입은 이전에 비해 증가한다. |
| ⑤ | 탄력적 수요 | - 산업 전체의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협력한다면 산업 내 생산자들의 총수입은 증가한다. |

25. 정부가 투자촉진을 위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정부지출을 위한 재정적자를 확대시키고자 한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 예상되는 자금시장의 균형이자율과 균형거래량의 변화로 옳은 것은?

- | | 균형이자율 | 균형거래량 |
|---|-------|-------|
| ① | 상승 | 감소 |
| ② | 불분명 | 증가 |
| ③ | 상승 | 증가 |
| ④ | 상승 | 불분명 |
| ⑤ | 하락 | 불분명 |

【 소방학개론 】

1.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황화수소(H₂S): 질소 성분을 가지고 있는 합성수지, 동물의 털, 인조견 등의 섬유가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맹독성 가스로, 0.3%의 농도에서 즉시 사망할 수 있다.
- ② 암모니아(NH₃): 질소 함유물이 연소할 때 발생하고, 냉동시설의 냉매로 많이 쓰이고 있으므로 냉동창고 화재 시 누출 가능성이 크며, 독성의 허용 농도는 25 ppm이다.
- ③ 염화수소(HCl): 열가소성 수지인 폴리염화비닐(PVC), 수지류 등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연소생성물로서 발생량은 적지만 유독성이 큰 맹독성 가스이며, 독성의 허용 농도는 10 ppm이다.
- ④ 포스겐(COCl₂): 폴리염화비닐(PVC)과 같이 염소가 함유된 수지류가 탈 때 주로 생성되는데 독성의 허용 농도는 5 ppm이며 향료, 염료, 의약, 농약 등의 제조에 이용되고 있고, 자극성이 아주 강해 눈과 호흡기에 영향을 준다.
- ⑤ 시안화수소(HCN): 황을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이 불완전 연소하면 발생하는데 계란 썩은 냄새가 나며, 0.2% 이상 농도에서 냄새 감각이 마비되고, 0.4~0.7%에서 1시간 이상 노출되면 현기증, 장기 혼란의 증상과 호흡기의 통증이 일어난다.

2.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 ②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 ③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 ④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에 주차하는 행위
- ⑤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행위

3. 가스 연소 시 발생하는 이상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불완전연소란 공기의 공급량이 부족할 때 일산화탄소, 그을음 등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 ② 연소소음이란 가연성 혼합가스의 연소속도나 분출속도가 대단히 클 때 연소음 및 폭발음 등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 ③ 선화란 연료가스의 분출속도가 연소속도보다 빠를 때 불꽃이 노즐에 정착되지 않고 떨어져서 연소하는 현상이다.
- ④ 역화란 기체 연료를 연소시킬 때 혼합가스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혼합가스의 양이 너무 많을 때 발생하는 이상 연소현상이다.
- ⑤ 블로우오프란 선화상태에서 연료가스의 분출속도가 증가하거나 공기의 유동이 강하여 불꽃이 노즐에서 정착되지 않고 떨어져서 꺼져버리는 현상이다.

4. 기상폭발에 해당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 ㄱ. 고체인 무정형 안티몬이 동일한 고상의 안티몬으로 전이할 때 발열함으로써 주위의 공기가 팽창하여 폭발한다.
- ㄴ. 가연성 가스와 조연성 가스가 일정 비율로 혼합된 가연성 혼합기는 발화원에 의해 착화되면 가스폭발을 일으킨다.
- ㄷ. 기체 분자가 분해할 때 발열하는 가스는 단일성분의 가스라고 해도 발화원에 의해 착화되면 혼합가스와 같이 가스폭발을 일으킨다.
- ㄹ. 공기 중에 분출된 가연성 액체가 미세한 액적이 되어 무상으로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을 때 착화에너지가 주어지면 폭발이 발생한다.
- ㅁ. 보일러와 같이 고압의 포화수를 저장하고 있는 용기가 파손 등의 원인으로 동체의 일부분이 열리면 용기 내압이 급속히 하락되어 일부 액체가 급속히 기화하면서 증기압이 급상승하여 용기가 파괴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ㄴ, ㄷ, ㄹ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긴급구조 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기본방침과 절차
- ㄴ.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목적 및 적용범위
- ㄷ. 주요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에 관한 사항
- ㄹ. 비상경고 방송메시지 작성 등에 관한 사항
- ㅁ.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영책임에 관한 사항
- ㅂ. 재난 발생 단계별 주요 긴급구조 대응활동 사항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 ③ ㄴ, ㄹ, ㅂ ④ ㄷ, ㄹ, ㅁ
- ⑤ ㄷ, ㄹ, ㅂ

6. 특수화재현상의 대응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비등액체팽창증기폭발(BLEVE): 탱크의 드레인(drain) 밸브를 개방하여 탱크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 ② 보일오버(Boil over): 소화수를 이용하여 개방된 탱크의 상부 냉각을 최우선으로 하고, 탱크 주변의 화재진화를 병행한다.
- ③ 파이어볼(Fire ball): 밸브나 배관에서 누출되는 가스가 연소하는 화염은 소화하지 않고, 그 화염에 의해서 가열되는 면을 냉각한다.
- ④ 백드래프트(Back draft): 지붕 등 상부 개방은 금지하고, 하부를 파괴하여 폭발적인 화염과 연소 확대에 따른 대피방안을 강구한다.
- ⑤ 플래임오버(Flame over): 폭발력으로 건축물 변형·강도약화로 붕괴, 비산, 낙하물 피해와 방수모 등 개인보호 장구 이탈에 대비, 자세를 낮추고 대피방안을 강구한다.

7.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소실면적의 산정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건물의 소실면적 산정은 소실바닥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화재피해 범위가 건물의 6면 중 2면 이하인 경우에는 6면 중의 피해면적의 합에 ()분의 1을 곱한 값을 소실면적으로 한다.

- ① 3 ② 5
- ③ 10 ④ 15
- ⑤ 20

8.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대한 정의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위험물이라 함은 () 또는 ()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 | | ㄱ | ㄴ | ㄷ |
|---|-----|-----|-------|
| ① | 가연성 | 발화성 | 국무총리령 |
| ② | 가연성 | 폭발성 | 대통령령 |
| ③ | 인화성 | 발화성 | 대통령령 |
| ④ | 인화성 | 폭발성 | 대통령령 |
| ⑤ | 인화성 | 발화성 | 국무총리령 |

9. 연소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산소농도가 높아지면 연소범위가 넓어진다.
- ② 불활성 가스의 농도가 높아지면 연소범위가 좁아진다.
- ③ 가연성 가스의 온도가 높아지면 연소범위는 넓어진다.
- ④ 가연성 가스의 압력이 높아지면 연소범위는 좁아진다.
- ⑤ 일산화탄소(CO)는 압력이 높아지면 연소범위가 좁아진다.

10.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조사업무처리의 기본사항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은 화재현장조사를 위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필요한 최대범위로 설정한다.
- ② 화재범위가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화재에 대해서는 발화 소방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에서 1건의 화재로 한다.
- ③ 지진, 낙뢰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다발화재로 동일 소방대상물의 발화점이 2개소 이상에서 발생 하여도 1건의 화재건수로 한다.
- ④ 건축구조물 화재의 화재소실 정도는 3종류로 구분 하며, 그중 전소는 건물의 70% 이상, 반소는 30% 이상 70% 미만이 소실된 것을 말한다.
- ⑤ 화재인지시간은 소방관서에 최초로 신고된 시점을 말하며, 자체진화 등의 사후인지 화재로 그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발생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

11. 건축물 화재 시 나타나는 중성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물 내부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과 일치하는 수직적인 위치가 생기는데, 이 위치를 중성대라 한다.
- ② 중성대 상부는 기체가 실내에서 외부로 유출되고 중성대 하부는 외부에서 실내로 기체가 유입된다.
- ③ 중성대 상부는 열과 연기로부터 생존이 어려운 지역이고 중성대 하부는 신선한 공기로 인해 생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 ④ 중성대 하부 개구부를 개방하면 공기가 유입되면서 연기가 외부로 배출되어 중성대가 위로 상승하고 중성대 하부 면적이 커져 소화활동이 용이하게 된다.
- ⑤ 현장 도착 시 하부 출입문으로 짙은 연기가 배출 된다면 상부 개구부 개방을 강구하고, 하부 개구부 에서 연기가 배출되고 있지 않다면 상부 개구부가 개방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12. 유류화재의 이상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프로스오버(Froth over): 점성이 큰 뜨거운 유류 표면 아래에서 물이 끓을 때 화재를 수반하지 않고 유류가 넘치는 현상
- ② 슬롭오버(Slop over): 탱크 내의 유류가 50% 미만 저장된 경우, 화재로 인한 내부 압력 상승으로 탱크가 폭발하는 현상
- ③ 오일오버(Oil over): 중질유 탱크 화재 시 액면의 뜨거운 열과가 탱크 하부로 전달될 때, 탱크 하부에 존재하고 있던 에멀션(emulsion) 상태의 물을 기화 시켜 물의 급격한 부피 팽창으로 탱크 내의 유류가 분출하는 현상
- ④ 링파이어(Ring fire): 액화가스저장 탱크의 외부 화재로 탱크가 장시간 과열되면 내부 액화가스의 급격한 비등·팽창으로 탱크 내부 압력이 급격히 증가되고, 최종적으로 탱크의 설계압력 초과로 탱크가 폭발하는 현상
- ⑤ 보일오버(Boil over): 중질유 탱크 내에 화재로 연소유의 표면온도가 물의 비점 이상 상승했을 때, 물분무 또는 폼(foam) 소화약제를 뜨거운 연소유 표면에 방사하면 물이 수증기가 되면서 급격한 부피 팽창으로 연소유를 탱크 외부로 비산시키는 현상

13. 제거소화방법으로 옳은 것은?

- ㄱ. 전기화재 시 전원 차단
- ㄴ. 가스화재 시 가스공급 차단
- ㄷ. 일반화재 시 옥내소화전 사용
- ㄹ. 유류화재 시 포소화약제 사용
- ㅁ. 산불화재 시 방화선(도로) 구축

- ① ㄱ, ㄴ, ㄹ
- ② ㄱ, ㄴ,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ㄱ.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 ㄴ. 비상콘센트설비, 제연설비는 소방시설 중 소화활동설비에 포함된다.
- ㄷ. 스프링클러설비, 연결송수관설비는 소방시설 중 소화설비에 포함된다.
- ㄹ.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 ㅁ.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는 내진설계대상 소방시설이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 ⑤ ㄴ, ㄹ, ㅁ

15. 물질의 상 변화에 의해 에너지 방출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폭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분해폭발 ② 압력폭발
- ③ 증기폭발 ④ 금속선폭발
- ⑤ 고체상 전이폭발

16. <보기>에 제시된 건축물 1층에서 발화한 경우, 직상 발화 우선경보방식으로 발하여야 하는 해당 층을 모두 나타낸 것은?

—<보 기>—
지하 3층, 지상 35층, 연면적 10,000 m²

- ① 1층, 2층
- ② 1층, 2층, 지하층 전체
- ③ 1층, 2층, 3층, 4층, 5층
- ④ 1층, 2층, 3층, 4층, 5층, 지하층 전체
- ⑤ 건물 전체 층

17.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설정에 대한 기준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m²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m의 범위 내에서 ()m² 이하로 할 수 있다.

	ㄱ	ㄴ	ㄷ	ㄹ
①	500	50	60	800
②	500	60	50	1,000
③	600	50	50	800
④	600	50	50	1,000
⑤	600	60	60	1,000

18. 가연성 물질의 연소 형태로 옳은 것은?

- ㄱ. 분해연소: 목재, 종이
- ㄴ. 확산연소: 나프탈렌, 황
- ㄷ. 표면연소: 코크스, 금속분
- ㄹ. 증발연소: 가솔린엔진, 분젠버너
- ㅁ. 자기연소: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화합물류

-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1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제3류 위험물의 품명 및 지정수량으로 옳은 것은?

- ① 나트륨 - 5 kg
- ② 황린 - 10 kg
- ③ 알칼리토금속 - 30 kg
- ④ 알킬리튬 - 50 kg
- ⑤ 금속의 인화물 - 300 kg

20. 화재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연물의 비표면적이 클수록 화재강도는 증가한다.
- ② 화재실의 열방출률이 클수록 화재강도는 증가한다.
- ③ 화재강도와 화재하중이 클수록 화재가혹도는 높아진다.
- ④ 최고온도에서 연소시간이 지속될수록 화재가혹도는 높아진다.
- ⑤ 전체 가연물의 양(발열량)이 동일할 때 화재실의 바닥면적이 커지면 화재하중은 증가한다.

21. 특수화재현상 중 플래시오버(Flash over)와 롤오버(Roll ove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롤오버는 화염이 선단부에서 주변 공간으로 확대된다.
- ② 플래시오버는 화염이 순간적으로 공간 전체로 확대된다.
- ③ 플래시오버는 공간 내 전체 가연물에서 동시에 발화하는 현상이다.
- ④ 롤오버 시 발생하는 복사열은 플래시오버 시 발생하는 복사열보다 강하다.
- ⑤ 롤오버는 실의 상부에 있는 가연성 가스가 발화 온도 이상 도달했을 때 발화하는 현상이다.

2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연면적 1,000 m² 이상인 판매시설
- ② 연면적 1,500 m² 이상인 복합건축물
- ③ 지하가 중 길이 1,000 m 이상인 터널
- ④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 층의 바닥면적이 300 m² 이상인 숙박시설
- ⑤ 건축물 옥상에 설치된 차고로서 차고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 m² 이상인 시설

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축질병 - 보건복지부
- ② 항공기 사고 - 국토교통부
- ③ 정부주요시설 사고 - 행정안전부
- ④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법무부
- ⑤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교육부

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 ③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⑤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및 관리자는 신규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긴급구조 교육을 받아야 한다.

2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의료시설에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해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스프링클러설비
- ② 자동화재탐지설비
- ③ 자동화재속보설비
- ④ 단독경보형감지기
- ⑤ 간이스프링클러설비